



# 안전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절실

2014년 4월 16일, 절대로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이 발생했다. 어른들의 안전불감증과 욕심 때문에 꽃다운 나이의 어린 학생들이 차디찬 바닷물 속에서 목숨을 잃었다. 유가족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슬픔에 젖었고 또 분노했다. 하지만 이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서울지하철에서는 추돌사고가 났고, 고양종합터미널에서는 대형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들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안전불감증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안전을 등한시 한 결과가 얼마나 큰 피해를 야기시킬 수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헌데 명심해야 할 것은 이들 사고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전국 곳곳 학교 건물에는 균열이 있고, 소방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다중이용시설도 부지기수다. 세월호 참사와 유사한 사고들이 언제든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을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이유다.

**위험요소는 발견 즉시 바로 잡을 필요 있어**  
사법적·정치적인 책임에 대한 잘잘못은 차후 문제다. 위험요소가 드러났다면 그것을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먼저다. 이에 국민 모두는 단호한 각오를 갖고 안전시스템을 확인해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안전에 대한 본질적인 인식이 필요하다. 이런 인식 없이 진정한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주지해야 할 것은 안전은 정확하게 그에 비례하는 비용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그것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비로소 우리 사회는 안전한 사회로 거듭날 것이다.

### 안전과 관련된 법·제도는 더 강화되어야

1960년대 이후 급속하게 산업 근대화가 추진되면서 우리 사회는 위험을 줄이고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시스템(안전조치, 안전교육 등)을 무시해왔다. 또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약간의 사후비용 정도만 지불하면 된다는 인식이 높았다.

여기에 더해 사후비용 마저 줄이기 위한 편법과 불법이 난무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에 안전과 관련된 법·제도는 더 강화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안전사고의 위험과 이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하는 행위가 근절될 수 있다.

특히 안전시스템 강화와 관련해서 시급한

것이 안전교육이다. 안전불감증 해소를 위한 최고의 방안이 안전교육의 강화, 확대라는 것을 부인하는 이들은 없다. 하지만 안전교육이 단순히 재난, 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모의훈련에 그쳐서는 안 된다.

### 안전을 학교 정규교과목에 편성시켜야

위험을 인지하고, 안전을 몸에 배게 하는 것이 안전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돼 있는 안전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실천해야 하는 기본 덕목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이라는 것을 학교 교육에서 인지시켜야 한다.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거나, 안전을 학교 정규교과목에 편성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안전교육의 패러다임이 이와 같은 방향으로 변화된다면 분명 모든 국민들의 안전의식이 제고될 것이다. 또 동시에 안전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크게 줄어든 것이 분명하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안전해 질 수 있는지 깊이 고민해야 할 때이다. ☺